2008납세 우수법인상 수상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동양저축은행

光州日報

2009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2009.2.3(화)~2009.2.9(월)

제18276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9년 1월 28일 (음력 1월 3일) 수요일

정부의 지역경기 부양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의 중추인 건설업계의 회생을 위한 미분양 해소방안 추진 등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 수완지구 아파트 단지 전경.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역경제 덫 '미분양' 풀릴까

당정, 양도세 면제 등 부동산 규제 완전 철폐 추진

광주·전남 18,000가구… '돈맥경화' 해소 큰 기대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전매 제한 완화 등 지방 미분양 해소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관련 업계에서는 지역경제의 중추인 건설업계의 회생을 위해서는 이번 조치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공공택지 전매제한 폐지 등 실질적인 지역 부동산 대책이 반드시 포함, 추진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관련기사 3면〉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1만3천277가구로, 수완지구는 44.4%인 5천908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지난해 정부의 '6·11 지방 미분양 대책'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의 미분양 주택은 1만8천627가구에 달하는 등 정부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나라당 '경제위기 종합대책상황실'은 최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과 부동산 대책 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지방 미분양 해소책을 포함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방안 등에 대해 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정 회의에서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전매제한 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 면제와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대안은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구입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방식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검토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2006년 하반기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건설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입한 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현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의 견인차인 건설업계의 회생을 위한 명실상부한 대책이 되길 고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실상 지역경제의 토대나 다름없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이번에는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회의에서는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 3구에 대해서는 지방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뒤 앞으로 시장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후속대책으로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경우 경제위기를 빌미로 다시 투기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 정서도 있어 규제 완화의 폭과 시기에 대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청연한의원
광주 상무지구 보이타워 5층

경제 행복도

전남 9위 광주 10위

광주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0위에 그쳤다. 광주시민들이 타 지역민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불행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전남은 9위였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대한민국 경제적 행복지수'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광주시민들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32.32로 전국 평균 33.3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10위를 기록했다. 경기가 42.0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은 작년 상반기 16위에서 9위(34.6)로 올라섰다.

광주는 특히 경제적 행복지수 구성요소 중 '경제적 불안' 부문에서 충북, 전북, 경남, 부산 등에 이어 꼴찌에서 5번째로 감산과 조업중단 등으로 인한 실직 공포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향후 경제적 발전 가능성을 묻는 '경제적 발전' 부문에서는 경기, 강원, 경북, 울산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

▲경제적 행복지수=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해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 경제적 안정·우위·발전·평등·불안 등 5개 하위지수를 더해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을 지수화(100점 만점)한 것으로 지수가 낮을수록 경제적 고통이 크다는 뜻이다.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쌀 완전 개방이 되레 유리"

농촌경제연 "관세 유예 지속땐 수입량·재고 늘어"

2014년까지 연장된 쌀의 관세화 유예를 앞당겨 푸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 연구원 김태훈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농업 전망 2009-쌀 수급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중장기 쌀 수급 전망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관세화 유예 정책을 지속하면 중도에 관세화로 전환할 때보다 쌀 수입량이 많고 재고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조기 관세화(시장 개방)가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이 연구 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연구용역 의뢰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말 정부에도 보고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당시 주요 쌀 수출국과의 협상을 통해 2005년부터 1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의무수입물량(MMA)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와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김 연구위원은 모두 4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해 각각의 경우 쌀 수입물량을 따져본 결과 중장기적으로는 조기 관세화가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4개의 시나리오는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유지할 경우와 2010년에 조기 관세화할 경우로 나눈 뒤 여기에 아직 타결되지 않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결과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을 경우와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를 각각 조합해 마련했다.

그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의무수입량 외에 추가로 수입되는 물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쌀의 생산 감소보다 소비 감소가 빨라 국내 쌀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국제 쌀 가격과 관세율이 높아 의무수입물량 외에 추가로 외국산 쌀이 수입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쌀의 관세화를 유예를 지속할 것인지, 조기 관세화로 전환할 것인지는 국가의 정책으로서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든지 쌀 산업을 지속 발전시키고 농가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4대강 외 섬진강도 정비

국토부, 친환경 개발 추진

4대 강 살리기와 별개로 섬진강을 생태 휴식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이른바 4대강을 살리는 작업과 함께 섬진강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많이 사람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섬진강은 가뭄, 홍수 등에 노출돼 있는 4대 강과 달리 보존상태가 상대적으로 좋고 수량도 풍부하다. 홍수 등으로 인해 인근 지역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거의 없다.

국토부는 섬진강을 개발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살리기' 차원에서 진행되는 4대 강과는 방향이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4대 강이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 제방을 쌓고 하천 바닥을 준설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데 비해 섬진강은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으로 기능 할 수 있도록 강을 따라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데 중점이 주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섬진강 인근 11개 시·군의 협의체인 '섬진강 유역 보존협의회' 회장인 조형래 곡성군수는 "현재의 섬진강은 '보존'이 아니라 '방치'된 상태로, 갈수기엔 물이 썩고 생태계가 변화하는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친환경적인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